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추진배경

01

전국 시군구 288개 중  
105개(46%)가 소멸위험지역이고,  
'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방 소멸위기 직면



지역거점을 육성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권을  
조성하고, 소멸위기지역에는  
자립역량을 강화할 필요

02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의료 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보험의 지출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

## 01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초광역 협력 추진기반 구축

국토기본법 개정(21.6발의)을  
통해 초광역권 계획\*  
법적기반 마련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기능분담 방향 포함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기업 생애주기별(유치→성장→인재정책)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미분양 클러스터 등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클러스터: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 →  
도점: 첨단산업·복합 지원시설 가능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농산어촌 지역에 '주거+  
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구축

쇠퇴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예)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  
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특화된  
재생모델 마련 등

농촌 공간 정비·재생 계획  
제도화 등 자립기반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 01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균특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이 주도하여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 수립

\* 행안부는 지역이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 '22~'31년)을 지원,  
범정부 협업 국고사업 우대 지원(22, 2.56조원 규모) 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

정책수립시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역량강화 추진



## 의료·돌봄 수요대응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합리적인 '의료-요양-돌봄'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 통합 제공

###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거동불편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위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ICT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지속 확충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육성 등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 인프라 강화

###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한 기관에서 통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돌봄기관의 규모화 유도



##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수가개편 지속 추진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산배분체계 개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